

메가시티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503
----------	-------

발의연월일 : 2024. 2. 7.

발 의 자 : 송갑석 · 이형석 · 신정훈
조오섭 · 소병철 · 김희재
민형배 · 김영배 · 윤재갑
강훈식 · 주철현 · 김승남
이개호 · 이용빈 · 서동용
오영환 · 이원택 · 윤영덕
이병훈 · 홍성국 · 송기현
(21인)

제안이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로 인해 단일 시·도 단위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더이상 수도권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경쟁에 놓여 지방은 경쟁력을 더욱 잃어가고 있음.

이러한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이제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다극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간 메가시티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메가시티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과 재정, 권한이 없어 이를 명시하는 법률 제정함으로써 규모

의 경제 달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이익 도모를 통해 수도권에 준하는 경쟁력을 갖추어 국가균형발전의 지평을 열고, 전국적으로 초광역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인접한 1개 이상의 시·도와 1개 이상의 시·군·구가 형성한 초광역권의 전체를 합친 행정구역을 메가시티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메가시티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메가시티지원위원회를 둠(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
- 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또는 규약으로 메가시티를 설립하고 메가시티 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메가시티 도시계획 및 건설과 관련한 메가시티 사무 등을 메가시티단체장의 소관업무로 함(안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메가시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메가시티단체장은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계획,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교통시설의 확충과 관련한 국가재정 지원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함(안 제32조부터 제62조까지).
- 마. 메가시티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메가시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영하도록 함(안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

메가시티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메가시티의 형성을 촉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2. “메가시티”란 인접한 2개 이상의 시·도 또는 인접한 1개 이상의 시·도와 1개 이상의 시·군·구가 설정한 초광역권의 전체를 합친 행정구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메가시티가 지역균형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상·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메가시티의 형성 및 발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메가시티 지원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메가시티를 지원하여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별 고유의 초광역 산업
2. 메가시티 내외적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이 보장되는 교통 수단
3. 주민의 산업 접근성이 동등하게 보장되는 물류, 유통 설비
4.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자연 환경
5. 문화와 첨단기술이 어우러지는 문화·정보 시설
6. 양질의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

제5조(메가시티에 대한 특별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메가시티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하여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메가시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시책을 메가시티의 지원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

토종합계획과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추진기구

제8조(위원회 설치) 메가시티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메가시티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메가시티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32조제7항에 따른 메가시티 광역도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3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3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35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제36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7. 제38조의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50조의 공동캠퍼스 입주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메가시티단체장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2. 메가시티의 개발과 지원에 필요한 뛰어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관계 기관, 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단체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소위원회) 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개발계획·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계획·설계 조정 소

위원회 등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 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해당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10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의 직권 또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위원회 사무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위원회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을 둔다.

③ 사무처장 외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메가시티 조직 및 사무

제22조(메가시티의 설립) ① 메가시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다.

1.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이를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

2.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② 제1항제1호의 협약에는 「지방자치법」 제202조제1항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202조제1항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메가시티”로 본다.

제23조(메가시티 의회) ① 메가시티의 의회는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협약, 제22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규약(이하 “협약등”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메가시티의 의회 의원을 겸할 수 있다.

③ 메가시티 의회가 의결하여야 할 안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메가시티를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메가시티단체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통지하고, 메가시티단체장은

그 내용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의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4조(메가시티 사무의 소관 및 행정기구) ① 메가시티단체장은 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메가시티의 의회에서 선출한다.

②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메가시티단체장을 겸할 수 있다.

③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④ 메가시티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초광역공무원을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초광역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메가시티의 조례로 정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메가시티는 협약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메가시티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직원을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⑦ 초광역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⑧ 메가시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⑨ 제8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

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25조(메가시티 사무처리의 기본계획) ① 메가시티의 사무는 메가시티단체장의 소관업무로 하며, 메가시티단체장은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메가시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메가시티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메가시티단체장은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가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메가시티 의회 의결을 거쳐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준용규정 등) 메가시티의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06조, 제207조, 제210조, 제211조를 준용한다. 메가시티로 승인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208조 및 제20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협약등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208조 및 제209조의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은 무효로 한다.

제27조(메가시티단체장의 업무)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 도시계획 및 건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2조에 따른 메가시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2. 제3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3. 제35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4. 제3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5. 제40조에 따른 조성토지 및 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
6. 제41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7. 제42조에 따른 준공검사
8. 제43조에 따른 메가시티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의 수립
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메가시티단체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0. 메가시티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11. 메가시티에서 메가시티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 유치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8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메가시티단체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 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메가시티단체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메가시티단체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30조(여론의 수렴) 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메가시티단체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31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메가시티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하여, 메가시티단체장은 제32조,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메가시티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각각 자문할 수 있다.

제4장 메가시티 도시계획 및 건설사업 등

제32조(메가시티 광역도시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메가시티와 인접 지역 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서로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메가시티 또는 메가시티와 그에 인접한 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메가시티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메가시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메가시티단체장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메가시티 광역계획권 지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청회 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메가시티 광역계획권 지정안의 개요

④ 메가시티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메가시티 광역계획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메가시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메가시티단체장은 제43조제4항에 따른 메가시티 도시계획위원회에 미리 자문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메가시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메가시티단체장”으로 본다.

⑥ 메가시티단체장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메가시티 광역계획권에 포함되는 시·도지사(이하 “광역계획권 시·도

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메가시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⑦ 메가시티단체장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가시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메가시티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메가시티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메가시티단체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메가시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메가시티단체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메가시티단체장과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⑫ 제6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메가시티단체장 및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⑬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항에 따라 단독으로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에 다시 협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조정할 수 있다.

⑭ 메가시티 광역계획권 또는 메가시티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⑮ 제4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4항에 따라 수립되거나 변경된 메가시티 광역도시계획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메가시티 광역계획권 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우선하며, 행정안전부장관·메가시티단체장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립 또는 변경된 메가시티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⑯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메가시티건설사업(메가시티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업무의 범위, 지정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본다.

④ 사업시행자는 메가시티건설사업의 일부를 자연친화적이고 입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는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개발방향에 따라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메가시티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메가시티건설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민간사업자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제3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메가시티건설사업의 개요
2. 인구배치 및 토지이용의 기본구상
3.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배치방향
4. 도시교통 및 경관·환경보전의 기본방향
5. 교육·문화·복지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의 기본방향
7. 재원조달 방안
8. 제35조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지침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메가시티단체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메가시티단체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메가시티단체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메가시티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의 변경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건설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계획을 메가시티단체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③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수용계획
2.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수용계획
3. 토지이용계획
4. 원형지로 공급될 토지와 그 개발방향
5. 교통처리계획
6. 도시문화계획

7. 경관계획
 8. 환경보전계획
 9. 교육·문화시설 및 보건의료·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0.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1. 메가시티건설사업의 시행기간 및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12. 메가시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지역
 13. 재원조달계획
 14. 메가시티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5.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지침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⑤ 메가시티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제32조제3항을 준용한다.
- ⑥ 메가시티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

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메가시티단체장은 직접 또는 메가시티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하되,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⑧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수립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며, 제3항제12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⑨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제6항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고시 전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기관은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3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었을 때에는 메가시티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메가시티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메가시티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메가시티단체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실시계획은 단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 ③ 실시계획에는 제35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실시계획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 ⑤ 메가시티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 전단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에서 정하는 지역·지구등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의 지형도면 고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⑦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 ⑧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제36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해제·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6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제시

- 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7.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호구역에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0. 「낙농진흥법」 제4조에 따른 낙농지구의 해제
 11.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2. 「농지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협의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8.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같
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국
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림의
조림·벌채 등의 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산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
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1.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
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
2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협의
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
2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3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3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3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3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② 사업시행자는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메가시티단체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해당 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수수료·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38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는 메가시티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의 범위·대상 등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메가시티단체장은 제51조의 메가시티 교통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시설 중 제63조에 따른 메가시티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시설(「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메가시티의 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메가시티 밖의 기반시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메가시티단체장 소속으로 기반시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반시설 조정위원회가 정한 설치계획 및 일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사업시행자는 메가시티 안에서 메가시티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메가시티가 지정 및 고시되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제3항 제11호에 따른 메가시티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메가시티의 지정 고시 전에 메가시티 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공익사업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이하 이 항에서 “종전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등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전공익사업이 이 법에 따른 메가시티건설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메가시티의 지정 고시일부터 기산(起算)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변경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고,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0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메가시티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메가시티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메가시티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26조에 따라 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계획의 내용, 공급의 절차·기준 및 가격 결정방법, 그 밖에 조성토지 및 원형지의 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원형지개발자는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발하여 조성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한정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 절차를 준용한다.

제41조(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 및 원형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는 경우에는 메가시티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메가시티건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메가시티단체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 메가시티단체장이 제3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메가시티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3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메가시티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메가시티단체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⑦ 메가시티단체장 또는 제6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 중 제35조제8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36조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메가시티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메가시티단체장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메가시티단체장”으로 본다.

② 메가시티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메가시티단체장이 도시·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하고 결정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메가시티단체장”으로 본다.

③ 메가시티단체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가시티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메가시티단체장의 고시는 메가시티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④ 메가시티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같음하여 메가시티에 메가시티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메가시티단체장”으로 보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메가시티”로 본다.

⑤ 메가시티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메가시티단체장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은 “메가시티단체장”으로 본다.

⑥ 메가시티 안에서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특례) ① 메가시티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4조 및 제24조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는 메가시티단체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메

가시티단체장”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메가시티”로 본다.

② 메가시티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행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메가시티의 특성을 고려하여 메가시티단체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메가시티단체장의 고시는 메가시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45조(민간투자사업의 특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도 불구하고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46조(건설공사 현장 등의 점검에 관한 특례) 메가시티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와 제51조에 따른 메가시티 교통계획에 따른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메가시티단체장이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한다.

제47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① 외국학교법인(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메가시티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학교법인이 메가시티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경제자유구역”은 “메가시티”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48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②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설립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의2를 준용한다.

제49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메가시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메가시티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① 메가시티단체장은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가 입주할 수 있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이하 “공동캠퍼스”라 한다)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학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캠퍼스를 조성한 경우에는 그 일부를 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③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메가시티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동캠퍼스 입주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입주절차 및 입주승인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동캠퍼스에 입주하려는 대학의 설립 및 설치에 관한 기준은 「고등교육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⑤ 메가시티단체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메가시티단체장은 제3항에 따라 입주한 자(이하 “입주기관”이라 한다) 및 공익법인에 대하여 공동캠퍼스 입주승인기준 이행 또는 운영·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동캠퍼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 메가시티단체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입주승인기준 또는 승인내용을 위반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명령이나 검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 메가시티단체장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2.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⑨ 메가시티단체장은 제8항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메가시티 교통계획

제51조(메가시티 교통계획 수립) ①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 관할 구역 내의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계획(이하 “메가시티 교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
3.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이 경우 「도시철도법」 제5조의 “도시교통권역”은 “메가시티”로 본다.
4.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이 경우 「도시철도법」 제6조의 “도시교통권역”은 “메가시티”로 본다.
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조에 따른 중기투자계획의 집행계획. 이 경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조의 “공공기

관”은 “메가시티”로 본다.

6. 대중교통의 안전성, 시각적 통일성, 접근성 개선 방안. 이 경우 대중교통에는 수상, 해상, 항공(「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심항공”을 포함한다)교통을 포함할 수 있다.

7. 교통소외계층 해소 등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방안. 이 경우 대중교통에는 수상, 해상, 항공(「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도심항공”을 포함한다)교통을 포함할 수 있다.

8. 그 외 메가시티의 교통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9. 각 호의 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 계획

③ 국가는 메가시티가 제2항 각 호의 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예산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이 넘는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메가시티 교통계획의 상세 요소 및 작성방법, 구체적인 추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메가시티 교통계획의 승인 등) ① 메가시티단체장은 5년 단위의 메가시티 교통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제43조제4항의 메가시티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메가시티 도시계획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교통 관련 계획 및 시책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소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심의 후 승인하여야 한다.
- ③ 메가시티단체장은 제51조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국가예산의 재정지원규모가 300억 원이 넘는 신규사업이 포함된 메가시티 교통계획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명칭, 목적 및 규모 등 개요, 추진방안,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첨부하여 메가시티 도시계획위원회를 경유하여 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해당 메가시티 교통계획을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의 승인이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경우, 제37조에 따른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장 메가시티 경제활성화

- 제53조(메가시티 경제활성화계획) ①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메가시티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이하 “메가시티 경제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메가시티에 특화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초광역권산업(이하 “메가시티산업”이라 한다) 또는 초광역권협력사업(이하 “메가시티협력사업”이라 한다)

2. 교통을 제외한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
3. 농촌의 낙후된 주거 또는 시설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
4. 메가시티 내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5. 메가시티 주민의 노동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교육사업 계획
6. 메가시티 내의 산업 연구시설 유치 계획
7.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
8. 그 외 메가시티 내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9. 각 호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 계획

제54조(메가시티산업 및 메가시티협력사업의 승인) ①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시대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메가시티단체장이 메가시티산업 또는 메가시티협력사업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이 완료된 경우 해당 메가시티산업 또는 메가시티협력사업을 해당 메가시티 고유의 특화사업으로 지정하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시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메가시티산업 및 메가시티협력

사업을 승인한 경우 다른 메가시티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동종의 메가시티산업 또는 메가시티협력사업 또는 초광역산업 또는 초광역협력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승인이 있는 경우 제37조에 따른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55조(메가시티 경제활성화 사무) ①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메가시티 관할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메가시티산업 또는 메가시티협력사업의 수행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통한 전용단지의 메가시티 관할 구역 내 조성사업
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수립
4. 수도권 공공기관 및 유망 기업의 유치 및 지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를 통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산업단지 등이 메가시티 구역으로 유치되어 입주한 경우, 메가시티단체장과 공공기관, 민간기업, 산업단지 등이 입주한 구역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은 개발이익 또는 법인세 세입 등 수입금의 50%를 메가시티의 회계로 전입하여야 한다.

제56조(메가시티 농촌활성화 사무)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 내 농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메가시티 관할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 수립 및 기본계획 승인
3. 기타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책의 수립 및 시행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제57조(메가시티 생활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의 확충)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 주민의 생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메가시티 관할구역 내 생활 편의시설 중 다음 각 호로 정하는 시설의 허가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8호의 관광 휴게시설
3.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8조(메가시티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①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

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②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메가시티 관할구역 내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59조(메가시티 천연자원 보호, 녹색성장 촉진 사무)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 관할구역 내 천연자원의 보호와 녹색성장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한다.

1. 먹는물을 포함한 수자원, 산림자원, 해양자원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계획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책 수립
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운영

제60조(지방공기업의 설립)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 사무를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거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다.

제61조(공공기관의 이전)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지역별 배분, 이전 대상 지역 등에 관하여 메가시티단체장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62조(메가시티 사무 추진을 위한 연구 및 데이터 수집) ① 메가시티 단체장은 메가시티 사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며, 그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메가시티 사무의 추진과 관련이 있는 것은 메가시티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데이터 중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국가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제공할 수 있다.
- ④ 메가시티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본 법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메가시티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7장 메가시티 특별회계

- 제63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운용) ① 메가시티에 관한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메가시티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회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 ③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회계를 관리·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부대시설 및 그 부지(공공기관의 청사 건설을 위하여 확보한 부지가 있을 때에는 그 부지를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사용료, 임차보증금 회수금 및 해당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轉入金)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豫受金)
4. 제66조에 따른 차입금
5. 제2항제5호에 따른 출자 및 용자로 인한 수입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메가시티에 입지할 공공기관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매입·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지원에의 지출
3. 제66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출자 및 용자
6. 제47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또는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7. 제48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8. 제49조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비용

9. 그 밖에 메가시티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출자 및 용자의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5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회계는 세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66조(차입금) ① 회계의 세출 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회계는 그 지출에서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7조(예비비)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할 수 있다.

제68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

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9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70조(「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우선 활용) 메가시티 및 초광역권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우선 활용할 수 있다.

제71조(재정특례) ①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의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교부 신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메가시티단체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메가시티가 처리하는 교육기관 관련 사무에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교부 신청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2조(메가시티 발전기금 설치) ① 메가시티단체장은 메가시티의 발전 및 사무처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메가시티 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용한다.

② 발전기금의 재원 및 용도 그 밖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메가시티의 조례로 정한다.

제73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메가시티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양도세·관세·상속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7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및 위원회의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2. 위원회에 파견되어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제75조(업무상 비밀 누설죄) 제18조를 위반하여 업무 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임명,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